

“자소서 폐지에 대학 양극화 우려… 개별고사 생길수도”

교육계,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내신 상대평가→절대평가 검토

“대학 입장서 수시 중요도 떨어져
수시로 3년과정 평가방식 효과적”

올해 대입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되면서 내신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고교 학점제의 도입과 함께 평가방식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 다른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가 절대평가와 결합 시 대학 간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4학년도부터는 지난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다.

다만 2025년부터 도입될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제를 시사했다. 교육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정시 중심의 대학 진학보다는 수시로 3년의 과정을 평가해 주는 방식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살리기에는 더욱 효과적”이라며 “내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교사들이 평가한 내신 점수의 기준을 검증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소서의 유무가 절대평가에서 내신 신뢰도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 설치되는 평가 지원 센터 등에서 교사들이 채점한 샘플링을 검토해 학교마다 내신 기준을 균등하게 관리해 주는 체계를 제안했다. A학교에서 맞은 A등급과 B학교에서 받은 A등급의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검증해주는 방식이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절정인 만큼 대입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처가 절실히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수능이 도입된 이래 31년 만에 수능 응시생 최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대전 10.1%, 광주 9.1%,

부산 8.8%, 전남 8.3%, 충북 8.1%, 전북 7.6% 순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지방 대학들의 위기가 가중되며, 서울권도 지난해 대비 9.6% 감소했다.

2년 뒤에는 반등했던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미달 위기가 일시적으로 극복되지만 학령인구 감소 여파는 곧바로 돌아온다. 특히 미래 수험생이 될 초등 학생의 수는 현재부터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학교 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105곳에 달한다. 이 중 17개 학교는 지난해부터 연속적으로 신입생이 없는 대위기를 겪고 있다.

임 대표이사는 “각 지역별 학생수 변화에 따라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자자체 등과 연계된 선제적 공동대응 필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등은 아직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대학에 산업단지 조성… 혁신거점 만든다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교육부 등 3개부처, 대학 2곳 신규선정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가 함께 대학의 유후부지를 도시첨단산업 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 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 활용하는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해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선정된 7개 대학은 강원대, 한남대, 한

양대 ERICA,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 소재 캠퍼스 제외)이며, 1만m²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35점), 대학의 사업추진역량과 의지(30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25점),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10점) 등 4개로 구성된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대학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추진계획 등에 대한 세부평가 항목은 기

존보다 강화된다.

공모 접수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함께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체 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26일부터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 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대학들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에서도 지역의 우수대학이 참여하여 산학협력 및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학교돌봄터 2호점 개소식이 열린 수내초등학교.

/성남시

고려대 ‘대학 혁신 연합포럼’ 개최

경희·국민대 등 8개대학 공동 주최

고려대학교는 26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SK미래관 죄종현홀에서 ‘지역협력과 대학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서울 흥릉지역 대학 혁신 연합포럼’을 개최한다.

제12회 KU 혁신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대학이 지향해야 할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대학 본연의 역할과 책임 확대라는 시대적 소명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고려대 대학정책연구원과 혁신지원원

사업운영팀이 주관하고, 고려대(서울·세종캠퍼스), 경희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등 8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4월 ‘홍릉포럼’ 소속 대학 간 공유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홍릉포럼 소속 대학 간 공유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진행된다.

고등교육생태계의 동반 성장과 혁신적인 공유협력체제 모델 창출을 창출하고, 대학 간 대학혁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 공유의 일환이다.

/신하은 기자

권혁성 삼육대 재무실과장 교육부장관 표장 받아

삼육대학교는 권혁성 재무실 과장이 ‘국민교육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권 과장은 지난 29년간 삼육대 총무과, 전산교육원, 기획처, 입학관리본부, 정보전산원, 대외협력처 등에서 근무하며 전산교육지원, 네트워크망 구축 운영, 학생홍보대사단 운영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사무처와 재무실에서 입찰 및 계약 구매업무 등을 맡아, 투명한 계약과 공정한 입찰을 진행함으로써 대학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신하은 기자

인·새봄교실

을 운영하고, 해당 학급의

청소년용역비를 지원해 교실 환경관리 부담도 덜 예정이다. 시범 운영학교 20개교에는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하고,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코딩, 로봇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후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한다.

경기교육청은 약 80개교를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희망하는 학교는 1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남교육청은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약 40개교를 대상으로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력격차 해소, 농어촌 특화(문화예술, 다문화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를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1학기 1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도입 등 운영시간을 다양화해 정규수업과 방과후 연계와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억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 공무원 120여명을 배치해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